

## “독일통일이 한국에 주는 교훈”

김영희 (우석대학교 초빙교수)

독일은 2차 대전 후 전승국인 미·영·불·소에 의해 4개 지역으로 분할되어 점령 통치를 받다 1949년 9월 독일연방공화국(서독)과 1949년 10월 독일민주공화국(동독)이 수립되어 동·서독으로 분단됨. 독일의 수도 베를린은 4개 지역으로 분할되어 점령 4개국이 직접 관할하는 “특수지역”으로 동독내에 위치한 “섬”과 같았음.

1990년 10월 3일 동·서독이 통일 될때까지, 베를린문제와 독일통일문제 등 독일전체에 관련된 사항은 전승 4개국의 권한과 책임 사항이었음. 서독은 세계 3대 경제대국이었으나, 정치적으로는 국가의 주권에 제약을 받는 나라였음. 따라서 독일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통일이 되리라고 예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음.

1985년 3월 소련에 고르바초프가 등장한 후 소련 및 동구권에 개혁과 개방의 물결이 전파되었고, 동독에도 1989년 1월부터 민주화를 외치는 시민들의 대량 시위가 급속히 확산되었음. 1989년 여름 폴란드, 체코, 헝가리의 서독대사관에 동독탈주민이 대거 진입하고, 급변하는 정국은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됨.

1961년 8월 13일 동독이 주민들의 대량 탈출을 막기 위해 설치한 베를린장벽은 1989년 11월 9일 동독공산당 대변인의 “역사적인 말실수”에 의해 순식간에 붕괴됨. 유럽에서 동·서 냉전의 상징이었던 베를린장벽이 아무도 예상치 않았던 시기와 방법으로 붕괴된 것임. 그리고 1990년 10월 3일 동독이 서독에 스스로 편입하는 방식의 동·서독 통합이 이루어짐.

필자가 가까이서 본 독일통일은 하나의 “종합예술품”임.

독일통일은 100만이 넘는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적으로 이루어졌고, 통독주역은 동독 주민들이며, 서독 정치가들의 정확한 기회 포착과 과감한 추진력, 서독의 막강한 경제력의 뒷받침, 서독의 노련한 외교력, 서독 공무원 집단의 저력과 전문성, 통일 후 30년 동안 동쪽지역 재건을 위한 세 금 인상을 감내하는 서독주민들의 인내심이 함께 어우러져 만들어진 “예술품”이라고 봄.

한국의 분단 상황은 독일과는 매우 다름. 한국은 대외적으로 주권의 제약을 받는 국가가 아니지만, 전쟁을 겪은 남·북한의 관계는 동·서독의 관계와 비교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독일통일이 한국의 모델이 될 수는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분단극복을 위해 시행한 많은 성공적인 사례와 통일과정에서 행한 실수는 한국의 분단극복을 위해 여러 시사점을 주고 있음. 한국은 통일을 대비한 준비에서 독일통일이 주는 교훈을 적극 연구하고 우리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목 차

1. 독일의 “기본법”과 “통일 정책”
  2. 동·서독 교류와 동독주민의 탈출
  3. 동구의 변혁과 동독의 붕괴
  4. 독일통일 후 대두된 문제점과 통합현황
  5. 독일통일의 역사적 의미와 한국에 주는 교훈
- 참고문헌

## 1. 독일의 “기본법”과 “통일정책”

### 가. 통일을 대비한 서독의 “기본법”

- 독일은 2차 대전 후 전승 4개국인 미·영·불·소에 의해 4개 지역으로 분할되어 점령국의 통치를 받았고, 1949년 9월 20일 독일연방공화국(서독)과 1949년 10월 7일 독일민주공화국(동독)이 수립되어 동·서독으로 분단됨.
  - 동독지역 내에 위치한 독일의 수도 베를린은 4개 지역으로 분할되어 점령 4개국이 직접 관할하는 “특수지역”으로 동·서독과는 별개의 지역.
- 서독의 ‘기본법’과 동독의 ‘헌법’
  - 서방점령국측은 1948년 4월 런던회담에서 서독지역에 민주정부를 수립하기로 결정하고 서독지역의 주수상들에게 헌법제정권을 허용한바, 이들은 서독에 수립될 국가의 ‘헌법’(Verfassung)을 독일이 통일될 때까지 과도기적 성격을 띠는 ‘기본법’(Grundgesetz)으로 제정하기로 결정하고, 1949년 5월 23일 ‘기본법’을 선포.
  - 동독지역을 점령하고 있던 소련은 1946년 4월 공산당(KPD)과 점령지역 내 사민당(SPD)을 통합 독일사회주의통일당(SED)을 창당하여 일당 독재체제를 구축하고, 1948년 SED는 동독의 헌법초안을 작성 1949년 10월 7일 헌법선포와 함께 독일민주공화국(DDR) 출범.
  - 서독정부는 동독정부가 국민의 자유로운 선거에 의해 세워진 정부가 아니라는 이유로 동독정부를 인정하지 않았고, 서독의 아데나워 수상은 “독일연방공화국만이 독일국민을 대변할 권한이 있다”면서 서독의 단독대표권을 주장.
- ‘기본법’에 포함된 통일관련 조항
  - 기본법의 前文에 ‘독일 민족은 자유로운 자결권으로 통일과 자유를 달성해야 한다’고 선언한 자결권 조항 포함.
  - 기본법 제23조에 ‘독일의 다른 주가 독일연방공화국에 가입하면 그 가입한 주에도 기본법이 적용된다’고 기술되어, 향후 동독지역이 독일연방공화국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줌.
  - 기본법 제116조(국적조항)는 동독주민도 독일국적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기본법 제11조에 모든 독일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다고 규정됨에 따라, 동독주민이 서독으로 넘어 올 경우 서독주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보장.
  - 기본법 제146조는 ‘이 기본법은 독일국민의 자유로운 결정으로 제

정된 동·서독 단일헌법이 발효되는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로 되어 있어, 통일 이후 동·서독 전체에 해당되는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겠다는 의지 포함.

**나. 독일의 “통일정책”**

- 동·서독 분단 극복과 통일에 대한 강력한 염원을 헌법제정에서도 나타내었던 독일인들이지만 1990년 10월 3일 동·서독이 통일될 때까지 “통일”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고 “통일정책” 대신 “독일정책”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
  - 2차 대전 패전국인 독일은 주권이 제한되어 있었고, 통일문제를 포함한 독일 전체에 관련된 사항과 베를린 관련사항은 전승 4개국의 권한과 책임사항
  - “독일정책”은 서쪽의 자유를 동쪽으로 전파하여 동독에서도 주민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고 동·서독 간에 평화를 이룩한 후 통일을 달성하겠다는 정책, 즉, 통일보다는 자유와 평화가 앞선다는 정책
- 아데나워(Adenauer)의 “서방정책”
  - 초대수상 아데나워는 패전의 잣터미에 놓여있는 독일의 ‘경제재건’과 ‘서구편입’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
  - 아데나워는 경제재건 문제는 경제장관 에어하르트(Erhard)에게 전담시키고 자신은 친서방정책, 특히 적대관계에 있던 불란서와의 화해와 관계정상화에 역점
  - 1950년 5월 불란서와 독일에서 생산되는 석탄과 철강을 하나의 공동 관리기구 아래 두자는 불란서의 제의에 따라, 1951년 4월 불란서, 서독, 이태리,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등 유럽 6개국이 체결한(1952년 7월 발효) 유럽 석탄철강공동체(ECSC)는 독일과 불란서의 화해의 바탕이며, 최초의 유럽공동체로서 현재 유럽연합(EU)의 전신
  - 아데나워 정부의 “독일정책”은 실질적 힘을 바탕으로 하는 정책으로, 표면적으로는 자유선거, 형식적으로는 소련과의 직접협상이었음, 즉 서구의 결속과 힘의 축적을 통해 세력균형이 서방측에 유리해지면 서독과 서유럽의 주도하에 소련의 양보를 얻어내는 방식을 채택코자 함.
- 브란트(Brandt)의 “동방정책”
  - 1969년 10월 28일 수상으로 선출된 빌리 브란트는, 동독을 국제법상의 국가로 인정할 수는 없으나 독일내의 특수한 관계에 있는 양국관계를 제도화하기 위한 정부 간의 협상과, 동서독간의 인적교류

*동·서독 분단 극복과  
통일에 대한 강력한  
염원을 헌법제정에서도  
나타내었던  
독일인들이지만 1990년  
10월 3일 동서독이  
통일될 때까지  
“통일”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고  
“통일정책” 대신  
“독일정책”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

*아데나워  
(Adenauer)의  
서방정책  
VS  
브란트(Brandt)의  
“동방정책”*

## 서독인의 동독방문

VS

## 동독인의 서독방문

- 증진, 교역확대 및 무력행사 금지를 촉구하고 소련 및 동구국가와의 긴장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요지의 “동방정책”을 천명
- 1970년 1월과 1970년 3월 두 번에 걸친 동·서독 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서독은 동독에 자유왕래, 우편, 문화 및 체육교류 등 분단의 고통 해소에 역점을 두었고, 동독은 국가 인정을 요구
  - 동·서독 협상 시, 서독은 동독을 외국으로 취급치 않아 ‘내독관계부’가 협상을 맡았으나, 동독은 외국과의 관계라는 점을 부각하여 외무부가 협상대표
  - 1971년 9월 동·서독 우편과 통신에 관한 의정서, 1972년 5월 26일 동·서독 간의 민간인과 화물이 모든 도로와 운하를 통과할 수 있다는 교통조약이 체결되고 1972년 12월 21일 동·서독이 상호 동등한 위치를 근거로 좋은 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는 요지의 기본조약(Grundlagenvertrag) 체결
  - 1973년 9월 18일 동·서독 유엔 동시 가입, 1974년 5월 2일 동베를린과 본에 양국 상주대표부 설치, 1974년 9월 4일 서방국가로는 마지막으로 미국이 동독과 수교
  - 당시 야당이었던 기민/기사연합(CDU/CSU)은 브란트수상의 동방정책은 분단을 영구히 하는 정책이라고 강력히 비난했으나, 1982년 집권 후에는 “동방정책”을 더욱 강화하여 1983년 동독에 19억5천 마르크 차관 제공

## 2. 동·서독 교류와 동독주민의 탈출

### 가. 동·서독 인적 교류

#### ○ 서독인의 동독방문

- 1953년 11월 미·영·불 서방 3개국의 점령지역 내 여권제도 폐지 이후, 모든 독인인들에게 기본법(Grundgesetz)에 의해 자유로운 여행과 거주지 이전이 허용되었고, 동독의 잦은 제한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주민간의 왕래 가능성은 열려 있었음.
- 동독정부는 동독에 부모 형제를 둔 서독인에게 1년에 1회 4주까지 동독체류를 허용하였고, 1954~1957년 사이 매년 평균 240만 명의 서독주민이 동독을 방문
- 1961년 8월 13일 베를린장벽이 구축된 직후에는 동독 방문이 거의 불가능 하였고, 1958~1962년 사이 서독주민의 동독방문은 매년 평균 70만 명 정도로 줄.

- 1972년 5월 26일 동·서독 교통조약이 체결된 후에는 서독주민의 동독방문은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1970년대 중반 이후에는 매년 300만 명에 달하는 서독주민이 동독을 방문

○ 동독인의 서독방문

- 반면 분단초기 동독주민이 서독을 방문하고자 할 경우 소련 점령 당국(후에는 동독정부)으로부터 여권을 발급받아야 했기 때문에 서독을 방문하는 동독인은 극소수에 불과
- 1953년 6월 17일 동베를린에서 공산독재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민 봉기가 발생한 후, 동독정부는 주민들의 불만을 무마하려는 차원에서 서독방문을 대폭 허용, 1954~1957년까지 매년 평균 250만 명의 동독인이 서독을 방문
- 1961년 8월 13일 베를린장벽 구축이후 급격히 감소되었던 동독인의 서독방문은 1964년 9월 동독정부가 연금자들에 한하여 1년에 1회 4주간의 서독방문을 허용함에 따라 다시 활발해져, 1965년부터 매년 100만 명 이상의 동독 연금자들이 서독을 방문
- 1972년 동·서독 교통조약 체결 후, 연금자 외에 서독 및 서베를린에 친척이 있는 동독인의 가정 사정(친척의 출생, 세례, 결혼, 문병, 사망 등)에도 서독방문 허용
- 이러한 서독 방문조건은 1983년 서독정부의 19억5천만 마르크에 달하는 대 동독 경제차관 제공 후, 1984년 8월부터 더욱 완화되어 매년 150만 명 정도였던 동독인의 서독 방문이 1986년에 200만 명, 1987년에 500만 명, 1988년에는 675만 명으로 급증
- 서독정부는 모든 동독방문자들에게 환영금(1972~1987까지 동독주민 1인당 1년 2회에 한하여 30마르크씩, 그 이후에는 1인당 1년에 100마르크) 지불과 여행경비, 의료지원 등 각종 사회복지 혜택을 줌.
-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기 전까지 전체 동독인구의 1/3이 서독을 방문함.

**나. 동독인의 탈출과 베를린장벽 구축**

- 전승 4개국에 의한 베를린 분할, 점령
  - 소련 점령지역인 동독 내에 위치한 독일의 수도 베를린은 제2차 대전 후 4개 점령 지역으로 분할되어 특수지역으로 연합국이 직접 관장
  - 서베를린과 미·영·불이 점령하고 있는 서독지역과의 연결은 함부르크, 하노버, 프랑크푸르트 공항과의 항공노선만 허용
- 베를린을 통한 동독인들의 탈출과 베를린장벽 구축
  - 소련의 점령지역에 거주하는 동독인들의 서베를린을 통한 서독 이주는 1949년 동독이 설립되기 전까지 13만 명에 이르렀고 그 숫자

*소련의 점령지역에 거주하는 동독인들의 서베를린을 통한 서독 이주는 1949년 동독이 설립되기 전까지 13만 명에 이르렀고 그 숫자는 계속 증가*

**1989년 7월 동구권에서  
휴가를 보내던  
동독인들은 동베를린,  
체코, 헝가리, 폴란드  
주재 서독 대사관에  
몰려와 서독이주를 신청**

는 계속 증가

- 1953년 6월 17일 동베를린에서 공산정권에 반대하는 시민봉기 발생  
전후 그해에만 50만 명의 동독시민 서베를린 경유 서독으로 탈출
- 서쪽으로 탈출하는 동독인들의 약 50%는 25세 미만의 젊은 층의  
산업인력으로 동독의 산업은 마비상태
- 주민들의 탈출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동독은 1961년 8월 13일 베  
를린장벽 구축: 1949년부터 장벽 구축 시까지 약 400만 명의 동독  
인 서독으로 탈출

#### 다. 서독의 이주민 수용 체제

- 3단계 이주민 수용 체제: 연방, 주, 지방자치 순서로 분산 수용
  - 동독주민이 서독에 도착하면 서베를린, 기센, 프리드란트 세 곳에  
설치된 연방수용소에 2~3일간 체류하며 독일주민증을 부여받은  
후, 각 주정부 수용소로 분산 수용: 각 주정부에 대한 이주민 할당  
기준은 각 주의 인구비례와 경제사정, 이주민 본인의 희망 (친척  
거주지 등) 참작하여 분배
  - 각 주정부는 산하 지방자치단체로 분산: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민들  
의 실질적인 정착 지원

### 3. 동구의 변혁과 동독의 붕괴

#### 가. 동독주민의 대량 탈출

- 1985년 3월 소련의 고르바초프 등장 이후 소련 및 동구 국가들에  
확산된 개혁·개방정책은 동독에도 영향
  - 1989년 1월 15일 라이프치히에서 시민 수백 명이 표현의 자유, 집  
회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는 시위를 시작으로 주민들의 개  
혁·개방요구가 점점 확산, 그러나 동독정부는 오히려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강경입장을 취함.
  - 1989년 7월 동구권에서 휴가를 보내던 동독인들은 동베를린, 체코,  
헝가리, 폴란드 주재 서독 대사관에 몰려와 서독이주를 신청
  - 특히 헝가리는 1989년 5월 오지리와의 국경선에 설치된 철조망을  
제거하여 헝가리-오지리 국경을 통하여 서독으로 이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어 동독인들이 계속 모여 들.
- 난민문제 해결을 위한 서독 정부의 적극적 개입
  - 1989년 8월 25일 Bonn에서 개최된 서독과 헝가리 간 비밀회담에

서, 헝가리는 동독 탈출민들의 서독이주를 허용키로 하고, 서독은 헝가리에 10억 마르크의 차관을 제공키로 합의

- 그 후 1989년 9월 10일 헝가리 정부는 오스트리아와의 국경을 완전히 개방하고 1969년에 체결한 헝가리-동독 간 여행협정을 일방적으로 폐기하였고, 1989년 8~9월 사이 헝가리-오지리를 경유하여 서독으로 탈출한 동독인들은 2만5천 명
- 체코와 폴란드의 서독대사관에 몰려든 동독 탈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총회에 참석 중이던 겐셔(Genscher) 독일 외무장관은 1989.9.27 체코, 폴란드, 동독 외무장관을 각각 만나 동독인 난민문제 해결에 관해 협상
- 특히 피셔(Fischer) 동독 외무장관과의 답판 시, 겐셔 외무장관은 두 가지 해결방안을 제시: 체코 및 폴란드 주재 동독 대사관이 동독 탈출자들에게 출국비자를 발급해 주거나, 탈출자들이 기차를 타고 동독 영토를 지나 서독으로 갈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촉구
- 이를 후인 9.29 피셔 동독 외무장관은 체코와 폴란드에 있는 동독 탈출자들을 추방하는 형식으로 서독에 보낼 것이라고 통보. 1989년 10월 1일 폴란드의 서독 대사관에 있던 800명의 동독인들과 체코의 서독대사관에 있던 5,500명의 동독인들은 기차를 타고 동독 영토를 지나 서독으로 왔고, 그 후 다시 수천 명의 동독인들이 바르샤바와 프라하로 몰려들었고, 동독인들의 대량탈출이 본격적으로 시작. 1989년 여름휴가철에 동독인 약 5만 명이 서독으로 탈출

#### 나. 베를린장벽 붕괴

- 동독 공산당 대변인의 “역사적 말실수”
  - 1989년 11월 9일 18:53 귄터 샤보스키(Guenther Schabowski) 동독 공산당 (SED) 대변인의 지루한 내외신 기자회견이 거의 끝나갈 무렵 이태리 기자 Ricardo Ehrman이 “SED가 며칠 전 동독국민들의 해외여행에 관해 발표한 법안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질문
  - 동독의 급변하는 정국에서 그 전날인 11월 8일 SED 대변인에 취임한 샤보스키는 11월 9일 공산당 중앙상임위에서 결정된 새로운 여행규정이 적힌 쪽지를 서류 속에서 찾아내어 더듬거리며 설명을 시작: 동독국민들이 앞으로 특별한 여행조건의 제약 없이 국외여행(서독 및 서베를린을 의미) 허가 비자를 ‘모든 국경 검문소’ 현장에서 받아 여행할 수 있다고 답변
  - “새로운 여행규정이 언제부터 유효하느냐?”는 질문에 샤보스키는 머리를 극적거리며 자신 없는 태도로 “즉시”라고 답변

**동독 공산당 대변인의  
“역사적 말실수”**

**동독국민들이 앞으로  
특별한 여행조건의  
제약 없이 국외여행(서독  
및 서베를린을 의미)  
허가 비자를 ‘모든 국경  
검문소’ 현장에서 받아  
여행할 수 있다고 답변  
“새로운 여행규정이  
언제부터 유효하느냐?”는  
질문에 샤보스키는  
머리를 극적거리며  
자신 없는 태도로  
“즉시”라고 답변**

동베를린, 드레스덴,  
막데부르크 등 동독  
전역으로 시위가  
확산되고 시위자들의  
구호는 “우리가  
국민이다”에서 “우리는  
한 국민이다”로 바뀔

- 그날 공산당상임위원회에 참석치 않아 새로운 여행규정이 다음날인 11월 10일부터 유효하다는 것을 몰랐던 그가 연출한 “세기의 실수”
- 베를린장벽의 붕괴
  - 동독 텔레비전을 통해 사보스키의 내외신 기자회견을 본 동독인들은 갑작스런 “여행자유” 발표에 모두 의아해하다가, 서독 공영방송인 ARD TV의 20:00 저녁뉴스에 동독의 여행자유발표 내용이 긴급뉴스로 보도되자 수천 명의 동독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베를린장벽의 국경검문소를 향해 달림.
  - 동독국민은 동독의 뉴스가 아닌 서독의 뉴스를 신뢰하여 이미 오래전부터 매일 밤 20:00에 동서독은 “통합”된 상태 (분단 시 동독 지역의 약 80%에서는 서독 TV 시청이 가능)
  - 수천 명의 주민들이 동베를린 국경검문소로 몰려 여행허가 신청을 하자 아무런 지시도 받지 못한 국경검문소 직원들은 상황을 몰라 우왕좌왕하였고, 그 사이 베를린장벽을 둘러싸고 인산인해가 이루어져 국경수비대가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
  - 서베를린에서 몰려온 시민들과 동베를린 시민들은 장벽위로 올라가 얼싸안고 환호하며 춤을 춤: 그날 밤 동·서독은 사실상 하나가 됨.

#### 다. 동독의 붕괴

- 베를린장벽 붕괴 후 급변하는 동·서독 상황
  - 1989.10.6 동독 건국 40주년 기념식에서 호네커(Honecker)는 동독 사회주의 승리를 주장하여 행사에 참석한 고르바초프와 주민들을 크게 실망시킴.
  - 라이프치히에서의 대규모 시위를 비롯하여 동베를린, 드레스덴, 막데부르크 등 동독 전역으로 시위가 확산되고 시위자들의 구호는 “우리가 국민이다”에서 “우리는 한 국민이다”로 바뀜.
- 호네커의 실각과 연속된 당서기장 교체
  - 지속되는 주민 탈출과 시위대의 거센 압력에 호네커는 1989.10.18 당서기장에서 물러나고 크렌츠(Krenz)가 당 서기장에 취임
  - 크렌츠는 주민들의 시위를 잠재우기 위해 동독주민의 해외여행을 1989.11.10부터 전면 허용키로 하였으나, 11.9 밤 사보스키의 “역사적인 실수”에 의해 베를린장벽이 붕괴: 주민들의 탈출을 막기 위해 설치된 장벽이 28년 후 주민들의 대량 탈출로 붕괴
  - 베를린장벽이 붕괴된 후 단 일주일 만에 900만 명의 동독인이 서베를린 및 서독을 방문
  - \* 당시 서베를린의 모든 슈퍼마켓에서 바나나가 완전 매진됨. 동

독에서는 공산당 고위간부들의 전용 매점에서만 바나나를 팔았기 때문에 모든 동독인들이 서독 방문 시, 이 상징적인 바나나를 구입하였음.

- 동독의 상황은 아침·저녁으로 다르게 숨 가쁜 변화: 11월 13일 신임 동독 수상에 선출된 모드로우(Modrow)는 동·서독 간 포괄적인 조약공동체 체결을 제안
- 콜(Kohl) 서독 수상 “단계적 통일안” 발표
  - 1989년 11월 28일 콜 수상은 독일과 유럽의 분단극복을 위한 “10개 항목”을 발표
  - 콜 수상은 독일 통일은 동·서독이 국가연합체의 단계를 거친 후 유럽통합의 연장 선상에서 추진될 것이라는 단계적 통일안을 제시. 당시 콜 수상은 독일 통일이 5~10년 후에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그러나 동독 주민들의 변화에 대한 요구는 견잡을 수 없이 확대되었고, 서독으로 이주하는 숫자도 폭발적으로 급증: 1989년 서독으로 이주한 동독인은 약 39만 명, 1990년 약 40만 명
  - 동독 이주민 외에도 동구권의 정세변화로 1990년 한해에 약 60만 명의 동구권 거주 독일계 후손이 서독으로 이주하여, 서독은 한해에 약 100만 명의 이주자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 이주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학교, 운동시설, 병영 등이 이용되고 실외에 콘테이너 임시숙소가 마련됨. 이는 더 이상 서독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콜 수상의 동·서독 통합에 대한 행보도 빨라짐.
  - 그동안 공산사회주의 체제하에서 자유와 풍족한 물질에 대해 굶주려왔던 동독주민들은 더 이상 인내심을 보이지 않았고 정치가들이 제시하는 단계적 통합정책으로는 그들의 폭발하는 욕구를 잠재울 수 없었음.
  - 동독 주민들은 시위에서 “도이치 마르크(DM)가 동쪽으로 오지 않으면 우리가 도이치 마르크로 가겠다”고 구호를 외쳤고, 서독의 Kohl 정부는 이러한 동독주민들의 동요를 막기 위한 특단의 정치적인 긴급조치가 필요
- 동독 최초의 자유선거와 동·서독 간 통합 합의
  - 1990년 3월 18일 동독에서 최초로 자유선거가 실시되었고, 드 메지에(de Maiziere)가 수상으로 선출됨.
  - 1990년 4월 23일 콜 수상과 드 메지에 수상은 동·서독 간 “경제·화폐·사회통합”(Staatsvertrag zur Wirtschafts-, Waehrungs-, und Sozialunion beider deutschen Staaten, 일명 “국가조약”)을 1990년 7월 1일자로

*1990년 4월 23일 콜 수상과 드 메지에 수상은 동·서독 간 “경제·화폐·사회통합”(Staatsvertrag zur Wirtschafts-, Waehrungs-, und Sozialunion beider deutschen Staaten, 일명 “국가조약”)을 1990년 7월 1일자로 실시하기로 결정*

1990년 8월 23일

동독의회는 동독이 “서독  
기본법 23조에 따라

1990. 10. 3 서독에  
통합”하기로 결의

실시하기로 결정

- 1990년 8월 23일 동독의회는 동독이 “서독 기본법 23조에 따라 1990.10.3 서독에 통합”하기로 결의
- 동·서독 대표 간에 협상된 “통일조약”(Vertrag ueber die Herstellung der staatlichen Einheit Deutschlands)이 1990.8.31 동베를린에서 서독의 쇼이블레(Schaeuble)와 동독의 크라우제(Krause)간에 서명
- “통일조약”은 1990년 9월 20일 동독 인민의회에서 법률로 승인
- 1990년 10월 2일 17시 동독 인민의회가 마지막 개최되어 동독정부 해산과 동독의 소멸을 공식 선언
- 1990년 10월 3일 밤 0시 베를린 구 제국의회 정면 계단에서 폰 바이체커 독일대통령은 환호하는 백만 군중 앞에서 독일통일을 선포
  - \* 독일통일은 동독이 서독의 기본법 제23조를 받아들여 스스로 서독에 편입한 것으로 “흡수통일”이라는 용어는 적합지 않으며, 독일인들도 이 용어에 대한 거부감 표명

#### 4. 독일통일 후 대두된 문제점과 통합현황

##### 가. 통일 후 대두된 문제점들

###### ○ 예상보다 열악했던 동독 경제 상황

- 동·서독 통일협상은 예상을 넘는 동독 주민들의 동요와 이에 따른 긴박한 정세변화 속에서 급속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통일 후에 현실적으로 대두된 문제점과 후유증도 예상보다 컸음.
- 동독주민들의 대량 이주사태를 막기 위해 급히 실시된 양측의 화폐통합은 동독마르크의 실질적인 가치와는 큰 차이가 있는 정치적인 결정: 당시 동·서독 마르크의 공식 환율은 4:1(암시장에서는 10:1이 넘었음)이었으나, 동독인들의 임금, 봉급, 연금 등은 1:1로, 현금 및 예금은 상당한 액수까지(14세까지 2,000동독마르크, 15-59세 4,000동독마르크, 60세 이상은 6,000동독마르크)는 1:1로, 그 추가액은 2:1로 교환하기로 결정. 화폐교환과 더불어 3,000억 동독마르크에 달하는 은행예금이 1,820억 서독마르크로 교환되었으며, 이는 평균 1.65:1의 교환율
- 통일 후 드러난 동독의 국가경제상황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열악: 사회주의 국가 중 소련 다음으로 높은 경제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던 동독이 이미 1989년 9월에 국가지불불능 상태였고 국가경제가 파산직전이었다는 사실을 서독은 알지 못했음.

- 화폐통합 후 통일독일이 넘겨받은 구 동독의 대외부채는 469억 유로 (부채에 대한 환율을 2:1로 제안했으나, 채권국가들의 반발로 1:1로 교환)
- 동독의 산업은 낙후하였고, 물, 토지 오염 등 환경문제는 심각한 상태였으며, 대부분의 주택과 인프라는 전면적인 보수와 신축 필요
- 시장경제체제로 전환 시 발생한 문제점들
  - 동독의 주택경제를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소유권 문제부터 우선 정리 필요성 대두
  - 주택소유권뿐만 아니라 동독을 떠나 서독에 거주하고 있던 과거 토지 소유자들에 의한 수백만 건의 재산소유권 반환소송은 동독지역에 대한 투자와 재건에 큰 장애물로 대두. 또한 서쪽에서 갑자기 나타난 원소유주와의 심리적, 사회적 갈등
  - 통일 당시 동독의 1인당 생산능력은 서독의 20~25% 수준이었고, 동독경제가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되면서 대부분의 초과 고용인력은 정리해고되어 실업자 수가 크게 증가: 경제통합이 이루어지기 전인 1990년 6월말 동독 실업자 수는 14만2천 명이었으나, 1990년 말 실업자수는 67만2천 명, 단축조업 특별규정이 만료된 1992년에는 실업자 134만 명
  - 이들 실업자들에는 공산당 고위직, 법률가, 장교, 외교관, 대학교수, 교사 등 구동독의 지배층들도 많이 포함
- 사회보장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
  - 동독시절에는 100% 고용이 원칙이었기 때문에 실업보험제도가 없었으나, 통일 후 사회시장경제의 유입과 함께 연금보험, 의료보험, 상해보험, 실업보험 도입
  - 동독의 연금은 1949년 이래 보험료 납부금 상한선이 월 600동독마르크로 고정되어 있었고 따라서 연금기금은 매우 빈약한 상태
  - 그러나 1990년 7월 1일 화폐통합과 함께 동독의 연금수준이 서독 수준으로 평준화 되어, 동독 연금자(조기 퇴직자 포함)의 80% 이상이 인상된 연금을 수령: 화폐통합 시 동독 연금자들은 서독 연금자 대비 56%의 연금 수준이었으나, 4년 후인 1994년 7월 1일에는 이미 서독수준의 95%에 달하는 연금을 수령
- 동독재건 자원 조달 문제
  - 통일 전 서독정부는 동독재건을 위한 세금인상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며, 국가의 “통일기금”(Fonds Deutsche Einheit, 1990~1994년 간 1150억 마르크)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간주
  - 통일 후 현실은 예상과 많은 차이 시현: 각종 세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 통일후 문제점

- 시장경제체제로 전환 시 발생한 문제점
- 사회보장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
- 동독재건 자원 조달 문제점

**통일과 함께 구동독  
지역의 정치, 경제,  
사법, 행정, 경찰,  
교육제도 등 모든 분야에  
서독의 제도가 도입됨**

하고 부족한 신연방주(구 동독) 재건 기금 마련을 위해 “연대협약”(Solidarparkt)이라는 세금이 1994~2004년간 신설되었고, 그 후 “연대협약 II”(Solidarpark II)가 2005~2019년까지 지속될 예정

- 독일통일 후 지금까지 동쪽에 지원된 총 규모는 계산법에 따라 많은 차이 발생: 최저 1조 유로부터 최고 2조 유로 사이의 액수가 동쪽 지역을 위해 지원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베를린 자유대학 발표에 의하면 1990~2009년간 구동독 지원액은 1조 6000억 유로), 그 중 대부분이 연금, 의료보험, 실업자 지원 등 각종 사회복지 부분에 투입되었고 실제로 구동독 지역의 재건을 위해서는 3000억 유로 정도가 투입됨.

#### 나. 통일 후 이룩한 성과

- 정치적, 경제적 통합 성공적
  - 통일과 함께 구동독 지역의 정치, 경제, 사법, 행정, 경찰, 교육제도 등 모든 분야에 서독의 제도가 도입됨.
  - 40년 동안 지배했던 공산주의 제도가 민주제도, 사회시장경제체제로 바뀜. 국가에 모든 것을 의존하던 공산주의 체제에서, 개인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제도로 바뀌는 급작스러운 변화는 동독 지역 주민들에게 커다란 충격이었고 적응하기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음.
  - 그동안 정치분야와 경제분야의 통합이 성공적이었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인정됨. 통일 후 8년 만에 연방하원의장에 동독 출신이 선출되고(Wolfgang Thierse), 통일 후 15년 만에 동독출신 여성이 연방수상에 선출되었음(Angela Merkel). 또한 독일 최대 양대 정당의 (기민당, 사민당) 당수로 동독 출신이 선출되었던 점 등은 정치분야 통합의 수준을 말해줌.
  - 그동안 서쪽의 막대한 경제지원으로 구 동독 지역이 완전히 변화되었고, 개인의 경제수준도 과거 동독 시절에 비해 현저히 높아졌음.
  - 모든 도로, 철도, 공항 등 교통망과 통신망이 최현대식으로 구축되었고, 붕괴되는 건축물들은 개축·신축되었으며 심각한 환경오염문제는 제거되었음. 수많은 박물관과 오페라하우스, 문화유적들이 보수되어 옛날의 위용을 다시 보여주고 있음.
  - 2008년도 동쪽의 서쪽 대비 생산성은 79%, 임금은 81.5%로 상승하였음. 그러나 실업률은 서독의 6.0% 보다 훨씬 높은 11.8%임. 구 동독 지역의 지역별 산업특성화 추진으로 일부 지역의 첨단산업은 국제적인 수준이며, 관광산업 활성화로 2008년도 구동독지역을 방

문한 관광객이 약 7천만 명에 달함(관광산업 종사자는 45만 명으로 구 동독 지역 직업종사자의 8%).

○ 현재 동·서독 지역의 경제적 격차는 이태리 남부와 북부의 차이보다 적음.

- 통일 후 소위 “분단비용”(각종 대 동독 지원, 난민지원, 높은 군대 유지비등)이 감소된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임. 통일당시 동독은 약 17만 명 서독은 약 50만 명의 군대가 있었으나, 현재 독일의 군대 수는 약 25만 명이며, 사병의 복무기간도 10개월로 대폭 감축됨. 군대유지비 감축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의 산업현장 진입이 빨라진 점 또한 국가 발전에 긍정적인 요소임.

○ 사회적 통합은 진행 중

- 자유는 공기와 같은 것이어서 부족할 때 그 절박한 필요성을 느끼는 것임. 또한 인간은 좋은 것에 대한 적응은 매우 쉽고 빠른 것임. 과거 그렇게 원했던 자유와 평화, 안정된 생활, 자유로운 여행 등은 이제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었음.

- 1990년 구동독 주민들의 평균 수명은 남성 69.5세(서독 72.2세), 여성 76.7세 서독 79.3세)로 서독과 큰 차이가 있었으나, 2007년 평균 수명은 남성 75.8세(서독 77.5세), 여성 모두 82.3세로 평균수명이 거의 비슷하게 되었음. 통일 후 2002년까지 구 동독 지역에 1025개의 의료시설이 신설된 것이 이를 반영함.

- 교육은 사회통합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임. 교육제도와 교과서가 바뀌고, 교사는 전문성과 과거 정치전력 등을 검증하여 재임용됨. 1990년 가을학기에 교과서 250만 권(독일어, 역사, 영어, 정치, 경제 등)이 일반학교에 보급됨.

- 구 동독의 기성세대 중에는 심리적으로 아직도 자신들이 “이등국민”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 특히 과거 동독 시절의 사회 지도층은 과거에 대한 향수 때문에 경제적 수준 향상에도 불구하고 지위적 박탈감에 대한 불만이 큼. 과거 동독 시절 반체제 운동을 했던 인사들도 통일 후 모든 제도가 하루아침에 서독식의 제도로 바뀌는 과정에서 통일의 실질적 주역이었던 자신들이 제3자로 전락한 것과, 또한 지난 40년간의 동독생활이 모두 무의미해진 것에 대한 허탈감이 큼.

- 동쪽의 이러한 사회적, 심리적 불만은 2009.9.27 독일 총선결과에서도 나타남:

구 동독 지역에서 구 공산당 후신 정당에 대한 지지도 26%

- 40년 동안 전혀 다른 제도와 가치관 속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의 사

구 동독의 기성세대  
중에는 심리적으로  
아직도 자신들이  
“이등국민”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

회적, 심리적 통합은 시간이 필요함.

\* 의식의 변화는 1세대(30년) 이상이 필요하다고 봄:

- 지난 2007년 11월 Der Spiegel 지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독일 통일의 승자(Gewinner) 또는 패자(Verlierer)로 느끼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24세 미만의 구서독 출신 41%, 구동독 출신 45%가 독일 통일의 승자로 느끼며, 각 15%가 패자로 느낀다고 답함. 반면 35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서독 출신 29%와 동독 출신 57%가 승자로, 서독출신 25%와 동독출신 20%가 패자로 느낀다고 답함.

## 5. 독일통일의 역사적 의미와 한국에 주는 교훈

### 가. “종합예술품” 독일통일

○ 필자가 본 독일통일은 수준 높은 “종합예술품”이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첫째, 독일통일은 평화적으로 이루어 졌음: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는 순간에 동서독에는 100만 명이 넘는 군대가 대치하고 있었으나, 한 방의 총성도 울리지 않았음. 만약 한 방이라도 총성이 울렸다면 사태는 급반전하였을 것이며, 평화로운 통일은 이루어지기 어려웠을 것임. 특히 당시 동독에 50만 명의 소련군이 주둔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 둘째, 독일통일의 주역은 동독주민들임. 체제에 반대하는 동독주민들의 목숨 건 시위와 탈출은 결국 동독 공산당정권의 붕괴를 가져왔음.
- 셋째, 서독 정치가들의 정확한 기회 포착과 과감한 추진력임. Kohl 수상은 급변하는 동독과 유럽의 상황을 놓치지 않고 이를 독일통일로 이끌어 갔음. 당시 고르바초프가 추진하는 소련의 개혁, 개방 정책은 반대파들에게 점점 밀리고 있었고, 독일은 고르바초프가 실각하기 전에 독일통일을 달성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 그리고 2차 대전 이후 국제법적으로 미해결 상태였던 폴란드와의 국경문제에서도 정치적 결단력을 발휘함. 즉 1937년 이전 독일 영토이었던 오더-나이세 강변의 동부 지역 영토(독일 영토의 약 23%)를 영원히 포기함.
- 넷째, 서독의 막강한 경제력은 통일을 앞당기는 원동력이었음. 서독정부는 헝가리, 체코, 폴란드의 서독 대사관에 진입한 동독주민들의 서독여행 허가를 위해 많은 차관을 제공했고, 특히 소련의 독

일통일 지지와 통일독일의 NATO 잔류 승인을 위해서 50억 마르크 (약 25억 유로)의 차관과 동독주둔 소련군 철수와 관련된 비용 전액(약 64억 유로) 제공 등 경제력을 최대한 이용함.

- 다섯째, 독일의 강력하고 수준 높은 외교력임. 18년 동안 외교장관을 역임한 Genscher 외교장관은 유럽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신뢰를 구축하고 있었고, 독일 외교 협상팀은 짧은 기간에 전승 4개국들과 주변국들의 독일통일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 내는 강력한 외교력을 발휘함.
- 여섯째, 서독 전문가 집단의 높은 저력임. 1990년 2월 7일 Kohl 수상의 본격적인 통일 추진이 발표된 후 동·서독 간 “국가조약” 체결이 추진되었고, “경제·화폐·사회통합”을 위한 각 분야를 총망라한 세부적인 법률을 짧은 기간 내에(1990년 5월 18일 동·서독 재무장관간 서명) 만들어낸 서독 법률가들과 공무원들의 전문성은 괄목할만한 것이었음. 이에 따른 문제점과 후유증이 물론 있었으나, 공무원들의 전문성은 평가할 만한 수준이었음.
- 일곱째, 서독국민들의 인내심과 연대감임. 통일 후 현재까지 구 동독 지역의 재건을 위하여 엄청난 액수가 지원되고 있으며 이는 즉 국민들의 세금인상을 통한 지원임. 구 동독 지역 지원금인 “연대협약 II”는 2019년까지, 즉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30년 동안 지속될 예정임.

#### 나. 독일통일의 역사적 의미

- 독일통일의 문제점과 후유증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으나, 독일통일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표명하는 사람들이 간과하는 중요한 역사적인 사안이 있으며 그 중 대표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독일은 통일과 함께 완전한 국가의 주권(volle Souveraenitaet)을 획득함. 2차 대전 패전국인 독일은 주권이 제한되어 있었으며 베를린과 통일문제를 포함한 독일 전체에 관련된 사항은 전승 4개국의 권한과 책임사항이었음. 즉, 통일 전 서독은 막강한 경제력(당시 세계 3대 경제력)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는 완전한 주권 행사에 제약 받고 있었음. 독일은 2+4 회담을 통해 전승 4개국의 통일 지지와 주권회복을 얻어냄.
  - 둘째, 통일 후 구 동독인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는 무엇 하고도 바꿀 수 없는 값진 것임. 그들은 읽고, 말하고, 쓰고, 학교 선택하고 직업 선택을 하는데 더 이상 제약을 받지 않으며, 원하는 나라에 여행할 수 있고, 또한 공포심과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음.

**독일은 통일과 함께 완전한 국가의 주권 (volle Souveraenitaet)을 획득함**

긴박하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대처해야  
했기 때문에 판단이  
잘못된 부분도 있음  
한국은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준비를 사전에  
한다면 자신들이 범한  
실수를 하지 않을 것임

- 셋째, 독일통일은 유럽 통합의 테두리 속에서 이루어졌음. 동·서독의 통합이 없는 유럽의 동구권 확대는 상상할 수 없으며, 유럽의 평화와 번영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임. 2004년 EU에 신규 가입한 10개 국가 중 8개국은 독일의 동쪽에 위치한 국가로서 독일은 현재 정치적으로도 유럽연합의 중심국임.

#### 다. 독일통일이 한국에 주는 교훈

- 독일인들이 한국에 주는 조언
  - 필자는 독일통일계기 “독일전문가”로 1991년 3월 외교관에 특채된 후 18년 동안의 외교관 생활 중 3년간 주 세르비아 대사직을 제외한 15년 동안 독일관계 업무를 수행하였음. 그동안 우리 대통령들과 수많은 고위인사들의 독일 고위인사들과의 면담에서 통역하거나 배석하였음. 모든 면담 시 우리나라 인사들이 독일 측에 마지막으로 항상 묻는 질문은 통일관련 우리에게 어떠한 조언을 하겠느냐는 것이었음.
- 독일 인사들이 공식적으로는 언급할 수 없는 내용이지만, 우호적인 입장에서 우리에게 조심스럽게 줄 수 있다고 말한 조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자신들이 상상했던 통일과정과 현실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었고, 자신들이 준비했던 시나리오와 자료들은 통일과정에서 휴지조각이나 다름없었음. 긴박하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대처해야 했기 때문에 판단이 잘못된 부분도 있음. 한국은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준비를 사전에 한다면 자신들이 범한 실수를 하지 않을 것임.
  - 특히 동·서독 “경제통합”에서 동독의 경제상황에 대한 판단이 현실과 큰 차이가 있어 통일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소요되었음. 한국은 북한의 경제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할 것임.
  - 급증하는 동독 난민들의 문제는 서독사회의 안정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 되었음. 그들을 동독에 머물게 하기 위해 “화폐통합”에서 경제적으로는 문제가 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과감한 정치적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음.  
한국은 통일시 북한인들의 남하를 막기 위해 독일과 같은 경제적 문제에 봉착되지 않도록 사전에 특별한 연구를 해야 할 것임.
  -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원소유주 반환은 민주, 자본주의 법에 의해 당연한 것이나, 통일 후 수백만 건에 달하는 원소유주들의 소송(상당수는 원소유주 사망으로 후손들에 의해 제기된 복잡한 사건)으로 구 동독 지역 재건이 상당기간 지연되었음. 또한 서독에서 갑자기

나타난 원소유주와 동독인들 간에 심리적, 사회적 마찰도 컸음. 그리고 원소유주에 대한 보상으로 국가적 재정부담도 대단히 컸음.

한국은 통일 후 원소유주 반환문제에서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독일과 같은 문제점을 갖지 않기 바람.

- 동·서독 통일시 서독의 전문가들이 동쪽으로 가서 모든 제도적 통합과 개혁을 주도하였음. 이에 대한 동독인들의 심리적 반감이 있었고, 이는 동·서독 내적 통합에서 걸림돌로 작용하였음.

한국은 사전에 북한 전문가 교육과정에서 내적통합에 대한 연구를 하고, 통일 후 “탈북자”들도 통합 전문가로 활용한다면 북한인들의 반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봄.

- 동·서독 통일의 원동력은 동·서독 국민간의 교류였음. 분단 시 독일은 인도적인 측면을 가장 중요시 여겼고, 대 동독 지원에서 항상 인도적 문제에 대한 양보를 얻어내는 데 주력하였음.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한국도 인적교류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임. 수많은 “바늘구멍”은 결국 어떠한 장벽도 붕괴 시킬 것임.

- 인간의 사고와 가치관은 변화하기 대단히 어려운 것임. 따라서 사회적·심리적 통합은 적어도 1세대(30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며, 아마도 진정한 내적통합은 통일 전에 태어났던 사람들이 모두 사망한 후에나 가능할 것임.

한국의 심각한 분단 상황과 기간을 감안할 경우 독일보다 내적통합이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음.

- 독일통일은 역사적 “선물”이었음. 고르바초프가 없었다면 통일이 불가능했을 것임. 그러나 미국의 강력한 지원이 없었다면 통일이 이루어질 수 없었음. 불란서와 영국을 포함한 우방국들과 모든 주변국들의 반대를 극복할 수 있었던 점은 미국의 완벽한 지지와 지원이었음. 한국의 통일과정에서 제2의 “고르바초프” 등장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나, 우방국들의 적극적인 지지는 반드시 필요할 것임.

- 한국과 독일의 분단은 배경, 과정, 상황 등이 매우 다르나, 분단으로 인해 감당해야 하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막대한 “분단비용”을 감안한다면, 통일 후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위해 지불하는 비용은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임.

○ 독일통일이 한국에 주는 교훈

- 예측 불허한 통일과정에 대한 대비: 독일통일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시기와 방법으로 실현되었음. 갑작스러운 베를린장벽 붕괴 후 독일은 급변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통일정책을 결정해야만 했고, 이에 따른 후유증도 컸음.

*한국은 독일과 분단  
상황이 매우 다르지만  
모든 가능한 통일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사전 연구와  
대비가 필요함*

**“탈북자 정책” 강화:  
탈북자의 정착 지원체계  
강화 및 통일 후 탈북자  
활용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한국은 독일과 분단 상황이 매우 다르지만 모든 가능한 통일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사전 연구와 대비가 필요함.

- 통일 후 발생할 통일비용에 대한 연구와 재원대책 강구: 독일은 막강한 경제력을 이용하여 통일을 앞당길 수 있었고, 또한 통일 후에도 엄청난 액수의 “통일비용”을 지불하고 있음. 한국은 “분단비용”과 “통일비용”에 대해 연구하고, 통일 후 발생할 비용에 대한 재원 마련 대책을 강구해야 함.
- 통일 대비 외교 협력관계 강화: 독일은 막강한 외교력과 미국의 강력한 통일지지로 모든 통일 반대국가들을 설득할 수 있었음. 한국도 동맹국들과 주변국들 및 다자협력 관계를 강화하여 통일에 대한 지지를 획득할 수 있도록 외교력을 강화해야 할 것임. 통일 후 발생할 비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위해서도 외교력의 강화는 절실함.
- 남·북한 교류 강화: 독일은 동·서독 간 교류, 특히 활발한 인적 교류가 통일을 앞당기는 역할을 했고, 통일 후 내적 통합에도 도움이 됨. 한국도 남·북한 교류, 특히 인도적 차원의 인적 강화 추구가 바람직함.
- 통일 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 통합에 대한 분야별 연구: 남·북한의 분단 상황, 분단 기간, 경제력, 인구비율 등은 독일의 상황과는 현저히 다름. 따라서 통합에 따르는 각종 후유증도 더 심각할 것임. 각 부처 산하 국책 연구기관에서는 해당분야에 대한 통합 연구, 특히 원소유주 반환 문제 등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갈등에 대비한 연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함.
- “탈북자 정책” 강화: 탈북자의 정착 지원체계 강화 및 통일 후 탈북자 활용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통일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제고 노력: 독일 통일에 대한 비용문제가 부각되면서 우리 국민들의 통일 염원이 저하된 점을 감안, 분단으로 인하여 지불하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인도적인 “분단비용”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변화를 추구하고, “우리가 왜 통일을 원하는가?”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 제고 노력이 필요함.

## 참고문헌

- Auswaertiges Amt(Hrsg.): Aussenpolitik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Dokumente von 1949 bis 1994, Koeln 1995.
- Bahr, Egon: Zu meiner Zeit, Muenchen 1996.
- Bundesministerium fuer Verkehr, Bau und Stadtentwicklung(Hrsg.): Jahresbericht der Bundesregierung zum Stand der Deutschen Einheit 2009.
- Bundesministerium des Innern(Hrsg.): Deutsche Einheit, Dokumente zur Deutschlandpolitik, Muenchen 1998.
- Bundesministerium fuer innerdeutsche Beziehungen(Hrsg.): Die Entwicklung der Beziehunge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und der DDR, 1973.
- Busch, Ulrich: Aufbau Ost - Bilanz und Perspektiven, in: Berliner Debatte Initial. 16, Nr. 1, 2005.
- Fuhr, Eckhard(Hrsg.): Geschichte der Deutschen 1949-1990, Insel 1990 Genscher, Hans-Dietrich: Erinnerungen, Berlin 1995.
- Hertle, Hans-Hermann: Chronik des Mauerfalls, Die dramatischen Ereingnisse um den 9. November 1989, Berlin 1996.
- Kohl, Helmut: Ich wollte Deutschlands Einheit, Berlin 1996.
- Lehmann, Hans Georg: Deutschland Chronik 1945-1995, Bonn 1995.
- Mueller, Uwe: Supergau Deutsche Einheit, Rowolt 2005 (이봉기 번역, “대재앙 통일”, 독일통일로부터의 교훈, 문학세계사, 2006).
- Mueller, Helmut(Hrsg.): Deutsche Geschichte in Schlaglichtern, Meyers Lexikon 1996.
- Paque, Karl-Heinz: Transformationspolitik in Ostdeutschland: ein Teilerfolg, In: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undeszentrale fuer politische Bildung, 28/2009.
- Ritter, Gerhard A.: Der Preis der deutschen Einheit. Die Wiedervereinigung und die Krise des Sozialstaates, Beck 2007.
- Schaeuble, Wolfgang: Der Vertrag, wie ich ueber die deutsche Einheitverhandelte, Stuttgart 1990.
- Schaeuble, Wolfgang: Und der Zukunft zugewandt, Berlin 1994.
- Schmidt, Helmut: Auf dem Weg zur deutschen Einheit, Bilanz und Ausblick, Reinbek 2005.
- Siebert, Horst: Das Wagnis der Einheit, Eine Wirtschaftliche Therapie, Stuttgart 1998.
- Teltschik, Horst: 329 Tage, Innenansichten der Einigung, Berlin 1991.
- 주 독일대사관 (발행): 숫자로 본 독일통일, Bonn 1992.
- 주 독일대사관 (발행): 동서독 교류협력 사례집, Bonn 1993.
- 주 독일대사관 (발행): 법률로 본 독일통일, Bonn 1995.
- 주 독일대사관 (발행), 저자 김영탁: 독일통일의 어제와 오늘 -독일의 분단과 통일 및 통합 과정-, Bonn 1997.
- 오준근: 독일연방공화국 60년, 베를린장벽 붕괴 20년, 한반도평화연구원, 2009.

**편집:**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2572 (697-120)

전화: 064)735-6500 팩스: 064)735-6512

E-mail: [policyforum@jpi.or.kr](mailto:policyforum@jpi.or.kr) <http://www.jpi.or.kr>

『JPI 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2005-9760